

# 찾동 시행 3년... 동 단위 → 골목 단위 '위기가정 발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 박원순 시장, 민선7기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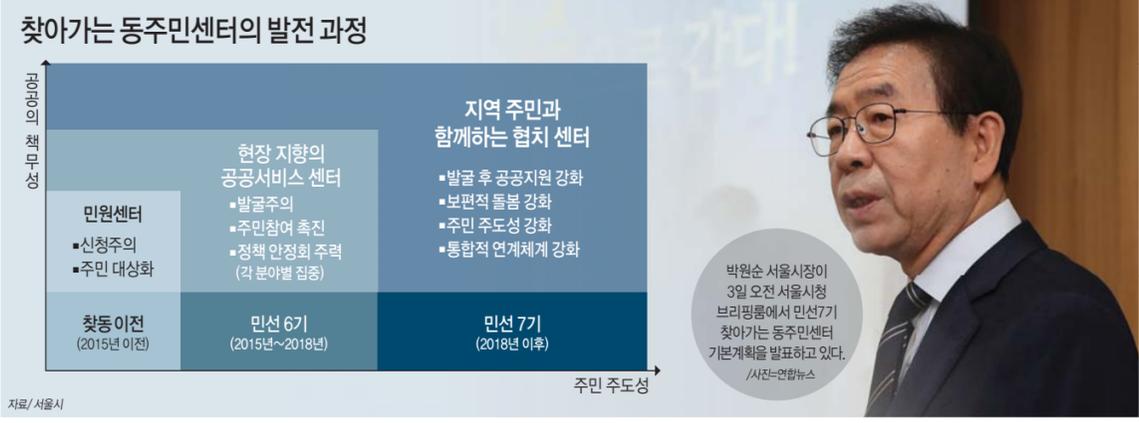
**'찾동 시즌2' 시민 긴급복지 강화  
2022년까지 인력 907명 총원**

그동안 동 단위로 이뤄졌던 서울시의 복지 서비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가 시행 3년 차를 맞아 골목 단위 협치센터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가 지난 2015년 7월 시작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공무원이 직접 어르신 가정, 빈곤 위기 가정 등 복지가 필요한 시민을 발굴해 지원하는 정책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일 오전 시청에서 '민선 7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대한민국 행정은 찾동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며 "동사무소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시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 복지 사각지대를 지워낼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찾동 서비스 시행 이후 고독사·자살사망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 사회지표 개선에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의 무연고사망자 수는 2015년 536명에서 2016년 571명으로 약 6.5%(35명) 증가했다. 무연고사망



자 수가 찾동이 시작된 2015년 7월 이후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2017년에는 513명으로 다소 줄었으나 2018년 6월 기준 30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 하반기에 상반기와 같은 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2018년 서울 시내 무연고사망자 수는 612명으로 추정된다. 전년과 비교해 약 100명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태수 찾동추진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찾동이 시행 첫해부터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며 "찾동은 2015년 4개 자치구에서 운영해 올해 5월 강남구 19개 동을 제외한 서울시 전제로 확대됐다"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사회지표가 동별, 구별로 나오지 않는다"며 "시행 후

적어도 3년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일까. 2015년부터 찾동 서비스를 시작한 자치구는 성동·금천·성북·도봉구다. '서울시 자살률 자치구별 통계'를 보면, 도봉구의 자살자 수는 2015년 91명에서, 2016년 75명으로 다소 줄었으나 2017년 98명으로 증가했다. 찾동 시행 전과 비교해 7명 증가한 셈이다. 금천구의 자살자 수는 2015년 57명에서 2016·2017년 64명으로 찾동 도입 전보다 7명 늘었다.

이 위원장은 "찾동 시즌 2를 통해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추진하다 보면 향후 사회지표 등 여러 측면에서 성공적인 변화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골목 단위로 확대된 찾동 시

즌 2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공공과 주민이 지역 문제를 발굴·해결하고,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을 위해 긴급복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서울시민은 '골목 회의'를 요청해 주민들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을 열 수 있다. 또 신청 72시간 이내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 '민선 7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본계획'은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 결정권 강화 ▲지역 사회보장체계 강화 ▲통합적 운영체계 구축 ▲사업 추진기반 강화의 4개 분야를 골자로 한다.

시는 주민 5명 이상의 발의로 소집되는 골목 회의를 도입해 민관이 함께 마을 문

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2022년까지 424개 전 동에 도입하고, 주민세 징수액을 주민자치회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시는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실직·재해로 인한 긴급위기 가구 등 어려움에 처한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 책임 돌봄체계'를 실현한다. 고독사 위험 가구에 복지플래너, 가족, 이웃과 방문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매년 50억원씩 확대 지원한다. 돌봄SOS센터를 통해 72시간 내에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방문,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시는 찾동의 모든 사업을 민·관 구분, 정책사업별 칸막이가 없는 '통합적 운영체계'로 추진한다. 유관사업 간 중복·누락을 막고, 복지수혜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찾동 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인력 기반 강화에도 나선다. 2022년까지 돌봄SOS센터 전담 인력을 포함 총 907명을 신규 충원한다.

박 시장은 "찾동 인력은 행정 효율보다 인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권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다"며 "찾동 2.0의 핵심은 보편돌봄과 민관협치다. 체감 있는 변화, 내 삶을 바꾸는 혁명의 주인공은 시민이다"며 "가까운 곳에서 시민 일상을 파고드는 정교하고 강력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119구급대, 연평균 환자 32만명 이송

## 소방본부, 3년간 구급활동 현황

**3년간 출동건수 총 158만건  
하루평균 환자 869명 이송**

최근 3년간 119구급대는 157만9975건 출동했으며, 이송환자 수는 95만220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3일 2015~2017년 질병별(병력별) 구급활동 현황에 대한 통계를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구급 출동 건수는 2015년 50만6546건에서 2016년 52만8247건, 2017년 54만518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송환자 수는 연평균 31만7400명, 일평균 869명으로 집계됐다.

구급활동 세부현황을 보면, 만성질환자 65만8539명, 교통사고 10만1553명, 낙상 등 사고부상 19만2110명이었다.

만성질환자 질병(병력)별 구급활동 순위는 고혈압이 20만3446명(30.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당뇨 12만0414명

(최근 3년간 12월 만성질환자 발생 추이)

구분	합계	간염	결핵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알러지	암	기타
17. 12.	22,154	67	56	7,839	4,532	2,064	61	1,659	5,876
16. 12.	19,972	58	66	6,175	3,662	1,700	60	1,376	6,875
15. 12.	18,758	60	59	5,823	3,365	1,600	55	1,282	6,514
누계	60,884	185	181	19,837	11,559	5,364	176	4,317	19,265

[자료=서울시 소방재난본부]

(18.3%), 심장질환 5만4697명(8.3%), 각종 암 4만8201명(7.3%), 결핵 2371명(0.36%), 간염 2430명(0.3%), 알러지 1941명(0.29%) 순이었다.

만성질환자는 12월에 60만884명으로 가장 많았고, 8월이 58만729명으로 뒤를 이었다. 시 소방재난본부가 만성질환자 구급활동을 분석한 결과 12월에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신고가 많았으며, 이들 질환의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심혈관계 만성질환자는 겨울철 급격히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 찬바람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온성이 뛰어난 기능성 옷과 모자 등

을 착용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음주 후 찬바람에 노출되면 혈관수축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며 "평소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사고 부상 중 교통사고 부상자는 10만1553명, 낙상 등 사고부상은 19만2110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사고 부상 중 낙상사고는 14만619명이 발생했다. 이중 겨울철 빙판길 낙상사고로 1394명이 부상을 입었다.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철에는 심장질환자 구급활동 건수가 많은 만큼 해당 질환을 가진 시민분들은 겨울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에너지정책 평가체제 마련... 역량 제고해야

경기연구원, 에너지비전 2030 보고서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목표 달성을 위한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위해, 기초지자체의 에너지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체제를 마련해 에너지정책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3일 31개 시·군의 에너지정책 평가모형을 구축하고, 시·군별 평가를 통해 도와 시·군의 에너지정책 연계 방안을 제시한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실현을 위한 시·군 평가 모델 개발'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 2030년까지 전력자립도 70% 달성, 에너지효율 20% 향상,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확대를 목표로 하는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선언했다. 경기연구원에서는 이를 위한 시·군 에너지정책 평가 모형을 구축하고 시·군별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모형은 '에너지정책성과 및 역량'과 '에너지자립 실천 노력' 등 두 부문으로 이루어졌다. 에너지정책성과 및 역량은 에너지효율(5개 지표), 에너지 생산(4개 지표), 제도적 기반(6개 지표)으로, 에너지자립 실천 노력은 사업추진 실적(4개 지표)과 역량강화(2개 지표)로 구성됐다.

평가모형을 적용한 시·군별 평가 결과, 에너지정책 종합점수는 안산시(가장 높았음)가 수원시, 안양시, 광명시, 성남시가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은 에너지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시민사회 역량이 높은 곳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 경기도, 상조업체 가입 '주의보'

자본금 요건 3억→15억 상향

경기도가 상조업체에 가입 중이거나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3일 도에 따르면 내년 1월 25일부터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현행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된다.

상조업체가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경우, 해당업체는 소비자들이 납입한 금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보상 절차 없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경우에는 공제조합 또는 은행을 통해 업체가 예치한 금액을 환급받거나 공제조합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약된 상조업체 등을 통해 대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업체가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 이상을 예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안 서비스 이용에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김승열 기자

# "땃글 달고 美 LA 가요" 서울시-LA시, 공동 이벤트

서울시 관광 홈페이지에 땃글을 달면 미국 로스앤젤레스(이하 LA)시로 무료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서울시와 LA시는 한국과 미국인들이 서로의 도시를 무료로 여행할 수 있는 '공동 온라인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은 17일까지다.

참가 희망자는 서울시 관광 홈페이지에서 L.A.의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방문하고 싶은 장소와 그 이유, 직접 촬영한 서울의 사진을 첨부해 땃글로 응모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경기·강원도, 공동 추진

경기강원 지역을 흐르는 지질자원의 보고(寶庫)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예정이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신청서를 지난 30일 유네스코 본부에 최종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22일 열린 제20차 국가지질공원위원회 심의에서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을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심의 결정에 따라 도는 한탄강 지질공원의 조건 이행계획과 함께 세계 지질공원 인증 신청서를 환경부 측에 제출했



한탄강 국가지질공원내 아트밸리-천주호. /경기도

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거쳐 유네스코 본부로 전달됐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은 경기도가 강원도와 함께 추진하는 상생협력사업 중 하나로, 우수지질 자원을 보유한 경기지역 포천·연천과 강원지역 철원을 흐르는 한탄강 일원이 대상이다. /경기=김승열 기자